

# “경제위기 극복에 역량 총동원 국민 삶·일자리 버팀목 될 것”

## 文 대통령, 포스트코로나 구상

### 한국판 뉴딜, 지역경제 부양 등 3대 신성장 산업 정책추진 예고

문재인 대통령은 남은 임기 2년간 경제 현안에 대해 살뜰히 챙길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한국 경제가 위기에 처한 데 따른 행보이다.

문 대통령은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국민의 삶과 일자리를 지키는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 관한 정책 행보를 강조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에 엄중한 인식을 드러낸 셈이다.

문 대통령은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한국판 뉴딜 ▲지역 경제 부양 ▲시스템 반도체·바이오 헬스·미래차 등 3대 신성장 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 먹거리 창출 등 정책 추진을 예고했다.

▲고용보험 적용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 기초 구축 ▲고용 안전망 확충 ▲국민취업제도 시행 등도 경제 위기 극복 정책으로 제시됐다. 코로나19 사태로 한국 경제가 위기에 처한 데 따른 고용 위기 상황을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정책과 관련한 데이터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일자리 창출을

##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 주요 내용

- 세계를 선도하는 '방역 1등 국가' 목표**
  -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
  -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도 도입
  -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대비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 감염병연구소 설립 추진
- 경제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 집중**
  - 지금까지 245조원을 기업 지원 일자리 대책에 투입
  - 3차 추가경정예산안 준비 중
-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길을 열자**
  - 선도형 경제를 통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
  - 고용보험 적용의 획기적 확대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통한 고용안전망 확충
  -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 추진
  -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연대·협력의 국제질서 선도 등 4대 과제를 제시

예고했다.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입력·정리·축적 과정 등에서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인력이 필요하다.

문 대통령은 이 과정에 필요한 인력과 관련한 일자리 마련으로 고용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일자리 정부’를 문 대통령 취임 초기에 강조한 만큼 공약 지키는 행보로도 해석된다.

지역과 중앙 간 경제 격차 회복도 문 대통령이 남은 임기 2년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한국 경제가 어려워질 경우 지역에서 먼저 타격을 받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오늘 말씀 드린 대책들도 전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이 모여졌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연설에서 언급한 소비 진작과 관광 활성화 대책은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말뉴스

전 국민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과 지역 사업으로 분류된 생활 SOC(사회간접자본)·국책·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시행 역시 “적극적으로 앞당길 것”이라고 문 대통령은 말했다. 이어 “노후 SOC를 스마트화 하는 작업들도 전부 지역의 사업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대구·경북, 광주·전남, 인천 등을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으로 지정한 사업에 대해서도 “지역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되고, 그 과정에 지역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업·고용 위기 지역’ 지정 방안도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했다. ‘인프라 구축’이라는 마중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나설 뜻을 내비친 셈이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 위리어플랫폼, 계룡대 인식이 문제



문영철 기자의 국방 칼럼

육군이 추진하는 개인장병 전투장비 현대화 사업인 ‘위리어 플랫폼’은 육군이 사활을 걸 정도로 중요하고,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하는 중대한 과업이다. 그런데, 육군의 상층부는 제대로 추진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

최근 육군참모총장에게 올릴 의도로 만들어진 내부 보고서는 전문적 소견이 있는 일선 군인들을 ‘덕후’로 표기했다. 더욱이 이들이 마치 유명 브랜드 제품을 좇는 사람이라는 뇌양상을 담고 있다.

본지가 10일 입수한 내부 문건은 ‘20210\_20년 위리어플랫폼 추진 계획(참모총장 보고\_본문)’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로, 특수전사령부의 내부의견을 메모로 정리한 문서로 추정된다.

주요내용은 ▲높은 국민적 관심에 비해 시범사업과 사업추진 품목의 중국산 납품 ▲지난해 적용한 일방경쟁 계약으로 특수작전 칼 등 3개 품목의 유통업체를 통한 중국산 납품 등이다.

그동안 육군이 외면해 오던 문제를 어느 정도는 인식하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전문가들은 육군 당국은 여전히 큰 틀에서 인식 전환을 하고 있지는 못하는 것이라는 견해다.

한 전문가는 “일선의 귀한 목소리를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라며 “야전에서 원하는 제품을 수의계약으로 보급해 주지 못하는 현실을 합리화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군용장비는 민간에서 쓰는 제품들과 달리 사용자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실전에서 검증된 브랜드를

구매하려고 하는 것”고이라고 설명했다.

이 보고서는 임무완성을 위해 개인사비로 우수제품을 구매하는 특전사 대원들을 ‘덕후’로 표기했다. 특히 이들이 개인 전투장비에 대한 불만이 많다면서 유명 브랜드도 제작은 대부분 중국에서 ‘주문자생산 방식(OEM)’으로 제작된다는 내용을 공청회와 사업설명회로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그렇지만, 보고서 내용과 달리 최근 군에 납품된 개인 전투장비는 유명 브랜드의 정식 라이선스를 가진 제품이 아니다. 때문에 현실을 보고서에 끼워 맞추려는 것이라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일선의 육군 간부는 “소통을 중시하는 군수뇌부가 여전히 변명에만 급급한 것 같다”면서 “우리가 덕후라면 계룡대(육군본부 지칭)는 극성 맘카페라고 불려야 할 것”이라며 실망감을 표현했다.

이와 관련해 육군의 고위 관계자는 군수참모부, 정책실, 전력단 어디가 작성한 문건이라며 “이런 것(비난 시각)이 위리어 플랫폼 전력화에 도움이 안된다. 그리고 덕후는 나쁜 의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덕후는 일본어 오타쿠(御宅·어택)를 희화하는 뜻의 신조어다. 일본어는 높임의 의미가 중복적으로 사용된 단어는 조롱과 차별의 의미로 통용된다. 오타쿠는 집에서 현실을 모르고 단편적 지식으로만 살아가는 비주류를 뜻하는 의미다.

좋은 의미라도, 군 내부 보고서 일지라도 ‘일본식 군사용어 잔재청산’이라는 추세와도 반대되는 속어를 군이 쓸 이유는 없다. 사랑하는 모군 육군에 겸허한 자세와 공부하는 자세를 가져달라고 당부한다.

/captinm@

# 8.3만명에 ‘가족돌봄비용’ 271억 지급

## 코로나19족 육아전쟁

### 고용부, 1인당 평균 32.3만원 받아 10인 미만 사업장 37% 가장 많아



정부는 온라인 개학 시간에는 학교를 개방합니다. 휴가 기간 동안 휴가 기간을 연장합니다. /연말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기 위해 휴가를 내고 정부로부터 비용을 지급받은 직장인이 8만명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등교 개학 이후에도 사정에 따라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총 8만3000명에게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 271억원을 지급했다. 가족돌봄 긴급지원금은 지난 3월 16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해 8일까지 총 9만 8107명(13만2600건)이 신청했다. 이 중 8만3776명에게 271억원이 지급돼 신청자 1인당 평균 32만3000원을 받았다. 신청자는 초기 하루 평균 3100건씩 접수되다가 지원 일수가 기준 5일에서 10일로 확대된 4월 9일 이후 하루 평균 접수 건수가 3800건으로 증가했다.

가족돌봄 긴급지원금 신청자는 사업장 규모별로 10인 미만 사업장이

산·울산·경남권 1만6583명(16.9%), 서울 1만5537명(15.8%), 대전·충청권(1만1458명), 대구·경북권(9805명), 광주·전라·제주권(8278명) 순이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개학 연기 등으로 인해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장애인 자녀는 18세 이하) 등을 돌보기 위해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원한다.

정부는 지난 2월말 가족돌봄비용을 1일 5만원씩 1인당 최대 5일(25만원)까지 지원하는 대책을 발표했고, 이후 개학이 계속 연기됨에 따라 지원 일수를 1인당 최대 10일(50만원)까지 확대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1·2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는 등교 개학일인 이달 20일 전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 된 자녀에 대해서는 5월 27일 전까지,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따로 정하는 개학일 전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한용수 기자 hys@

36.5%(3만5834명)로 가장 많고, 이어 ‘300인 이상’(2만9564명), ‘10~29인’(1만4167명), ‘30~99인’(1만251명), ‘100~299인’(7944명) 순으로 사업장 규모가 파악되지 않은 신청자는 347명이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2만8775명)이 가장 많았고,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만4304명), ‘도소매업’(1만1044명) 순으로 신청자가 많았다.

신청자 성별로는 여성(64%)이 남성(46%)보다 많았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강원권이 3만 6446명(37.1%)으로 가장 많았고, 부

## 농식품부, 농산업체 스마트팜 ICT 지원

### 19일까지 참여 희망업체 모집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팜 정보통신 기술(ICT) 기자재 국가표준 확산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농산업체를 오는 19일까지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스마트팜 ICT 기자재 국가표준 확산 지원사업은 스마트팜에 필수적인 센서, 유동판, 환풍기 등을 생산하는 업체별 전기적·기계적 규격이 달라 특정 업체가 도산할 경우 사후관리가 어려운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앞서 2018년 12월 스마트팜 ICT 기자재 국가표준이 제정됐고, 이에 따라 올해부터 국가표준을 국내 스마트팜 농산업체가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스마트팜에 사용되는 센서와 구동기의 규격표준은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일산, 풍향, 풍속, 감우, 광양자, 토양 함수율, 토양 수분 장력, 전기전도

도(EC), 소소이온농도(pH), 지온 센서 13종과 천장, 측창, 보온 덮개, 차광막, 환풍기, 유동판, 관수 모터, 관수 밸브, 냉난방기 구동기 9종에 적용된다.

표준 확산사업에 참여하는 농산업체에는 전문가 컨설팅 지원(50개 업체 내외)을 통해 제품 설계변경을 한 후 시제품 제작 및 제품개선(75개 업체 내외)을 하도록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또 올해 하반기 ‘국가표준 검증 바꾸어 지원’을 위해 모집하는 농산업체와 함께 국가표준 적합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바꾸쳐도 지원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표준 확산 사업에 대한 세부 사업 내용을 알리기 위해 전북 익산 소재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대강당에서 11일 오후 1시 30분 사업설명회를 진행한다. 설명회에서는 신청 자격, 선정 기준, 지원 내용 등에 대해 전하고 질의응답 시간도 갖는다. /한용수 기자